

[칼럼]

왜 지금 칠레의 개헌인가?

박윤주(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모네다궁.광장 왼쪽에 아옌데 동상이 서 있다. ©조용환,<안데스를 걷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진실의 힘 뉴스레터를 통하여 칠레의 사회 개혁 요구 시위와 그 뒤를 잇는 개헌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칠레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심지어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뜬금없이 왜 칠레의 개헌 시도를 살펴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칠레는 너무 멀리 있는 나라이고, 그 생경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거실의 TV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설명하거나 심지어 그 혼란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레의 사례, 특히 꽤 오래 진행된 칠레의 개헌을 위한 노력과 그 노력의 부분적 성공, 나아가 얼마 전 들려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의 소식은 한 사회가 변화하는 방식, 그 노정에서 일어나는 저항, 나아가 이를 극복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칠레는 먼 국가이다. 하지만 그렇게 멀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지금의 문제에 몰입한 우리에게 잠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우리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한다. 머리가 복잡하니 TV를 끄고 먹방을 켜는 것보다는 TV를 잠시 끄고 칠레의 노력과 좌절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과 잠시 거리를 두되 애정과 관심을 멈추지 않는 괜찮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TV를 켜기가 두려울 정도로 뉴스는 혼란스럽다. 각자가 서 있는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이 어디인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시절이 시작된 듯하다. 앞서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죄악시되고 다 같이 추진하자고 했던 것들이 부정된다. 예컨대, 이전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을 정했던 방식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은 놀라운 지경이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지워진 듯하다. 이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 끝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는 시민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전 정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이 과정은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한 정책 결정 방식이지만 탈원전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토론회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은 듯하다.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려진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결정은 특별한 공론화의 과정 없이 폐기되었다.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정이 이렇듯 쉽게 뒤집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정은 또 어떻게 구성 혹은 재구성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던 중 칠레에서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의 소식이 전해졌다. 2019년 10월부터 5개월 간 칠레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이 조직한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는 곧 전국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로 확대되었고, 여성, 원주민, 학생, 교사, 노동자, 연금생활자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은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 청산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모아졌다. 그리고 대표적인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1980년 신헌법 (이하 1980년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다양한 시위참여자들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요구는 칠레 정치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후 개헌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약 80%의 찬

성으로 개헌과정이 시작되었다. 곧이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도 구성되었다. 여성, 원주민, 학생, 노동자 등 칠레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입법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사회변혁을 제도화하는 칠레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제헌의회가 내놓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약 62%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 부결은 예상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 들고 보니 여간 허탈한 것이 아니었다. 분명 거의 80%의 국민이 개헌을 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다시 6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시 한번 민주 사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를 느꼈다. 무엇보다도 칠레의 다양한 사회 세력이 헌법이라는 공간을 두고 벌이는 갈등과 협력, 투쟁과 타협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성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은 모든 사회에서 버팀목이 되어준다. 우리에게도 헌법은 각별하다. 우리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영화 대사로 활용될 정도로 익숙하고 동시에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에 기대하는 바를 상징한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의 성격, 민주주의의 내용, 중요한 권리들에 대한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칠레와 우리는 닮았다. 하지만 칠레에게 헌법은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대원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칠레의 헌법은 말 그대로 칠레의 역사를 거쳐 계속되어온 칠레 시민들의 투쟁과 성공 그리고 좌절과 극복의 기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 역사상 최초로 선거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부였던 아옌데 정부의 헌법 개정이다. 노동자와 농민 세력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옌데 정부 하에서 칠레 하원은 외국 자본의 구리 대광산 지분을 국유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날을 칠레의 두 번째 독립기념일이라고 선언하며 칠레가 마침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냈다고 천명하였다. 아옌데 정권을 탄생시킨 노동자·농민과 함께 외국 자본의 착취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수많은 시민들의 의지가 헌법에 반영된 순간이었다.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아옌데의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리 대광산 국유화의 기조는 유지되었다. 피노체트의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의 역사적 무게는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 하더라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1980년 피노체트는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권리를 갖는 존재로, 가족을 사회의 근본적 핵심으로 천명한 1980년 헌법은 제4조에 가서

야 칠레가 민주 공화국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제9조에서는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을 본원적으로 반(反)인권적 범죄라 규정하고, 테러리즘으로 규정된 범죄는 정치적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당시 피노체트 정권이 민주화 인사들의 시위와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리스트는 정치범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조항은 대표적인 악법이며, 지금도 칠레 원주민들의 투쟁을 제어하는 도구로 소환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헌법도 칠레 사회 세력 간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1980년 개헌안의 통과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온전히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엔데의 사회개혁에 반발하여 강력하게 연대한 칠레의 자본, 군부, 그리고 이후 이들과 결합한 중산층들의 의지가 피노체트 정권의 탄생과 1980년 헌법의 제정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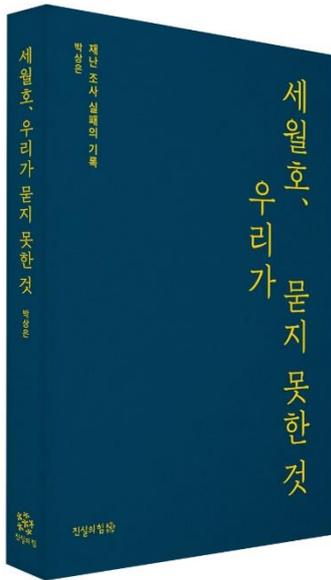
2019년 10월부터 칠레를 뜨겁게 달궜던 시위대의 사회 개혁 요구는 1980년 헌법을 개헌하라는 요구로 모아졌다. 시민사회세력들이 고발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공통된 원인으로 청산되지 않은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잔재가 지목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다시 한 번, 칠레 사회 세력의 의지가 헌법에 반영될 것이 예고되었다. 아엔데 정권 하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이들과 결합한 반외세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헌법의 수정 논의를 주도하였고, 피노체트의 독재 하에서는 자본, 군부, 그리고 이들과 결합한 중산층의 의지가 신헌법의 근간이 되었다면, 2019년 터져 나온 개헌 요구는 그동안 칠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원주민, 도시 빈민,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다. 이렇듯 칠레 헌법의 변화는 그 진보 혹은 보수적 색채를 떠나 언제나 칠레 사회의 사회 세력 간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칠레에서 언제 어떤 세력이 어떻게 헌법을 수정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칠레의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헌법이라는 공간을 주도하기 위하여 성공과 좌절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차분히 복기하다 보면, 우리의 사회 세력들 간 관계를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의 성공과 좌절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번의 연재를 통하여 최근 칠레에서 있었던 개헌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글에서는 2019년 칠레의 뜨거운 여름,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도시를 점거하고 외쳤던 다양한 요구들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그러한 요구가 개헌의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글에서는 칠레 개헌 국민투표 부결을 살펴볼 것이다. 부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헌의회의 활동 그리고 개헌안의 내용 등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 사회의 기대가 좌절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 좌절을 다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과 성과 또한 조망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평]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오현주(단원고 장준형군 어머니)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참사위) 종합보고서가 도착했다. 상자에 담긴 8권의 책자들 옆에서 우리는 차례 음식을 만들었다. 차례상의 주인은 이제 26살이 된 큰 아들이고 나의 남편과 아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이다.

3년 6개월에 걸친 조사 후에 사참위는 종료되었고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유가족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쨌든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차례상을 물리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난 8년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고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은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과연 세상은 세월호 참사 전후로 얼마나 달라진 걸까?

박상은 작가가 이 책에서 지적한 416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사참위에서 반복되었다. 대다수 조사관들은 사참위 내 소통의 단절을 호소했고 안전소위와 진상소위의 갈등은 여전했으며 종합보고서 기초를 둘러싼 반발도 변

함없었다. 괄목할 만한 조사 성과들은 침몰 원인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무시되었고 보수 언론은 또다시 세금 낭비를 들먹였다. 조사기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재난의 국가 책임을 당연히 묻기 시작했고, 재난 피해자를 향한 모욕은 비난받기 시작했다. 위험을 생산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안전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은 미약하나마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재난을 통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으려면 조사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이 책에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은 적지 않지만 솔직히 대부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슬프다. 그에 반해 이 책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읽기 쉽다. 지나온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어려워 생겨난 많은 질문들이 저자와 직접 토론해보고 싶게 만든다. (내가 아는 저자는 그 토론들에 흔쾌히 응할 인품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다.

[논평]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화위 조사결과에 부쳐-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부랑인으로 칭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해 실제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8월 24일,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기자회견장.

형제복지원(이하 ‘복지원’)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근식 위원장이 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35년만에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1987년 복지원 수용자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폭행·감금한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외압에 의해 축소됐고, 축소된 공소사실 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

됐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도 이른바 ‘부랑인’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5년 출범한 1기 진화위는 복지원 강제수용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은 그대로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2012년 피해자 한중선씨가 국회 앞 1인 시위로 공론화를 촉발하고, 곧이어 합류한 최승우씨와 3년에 걸친 노숙농성을 통해 시민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2기 진화위를 이끌어냄으로써 전기를 마련했다.

진화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 관계 법령, 치안 관계 법령, 내무부훈령 제 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의적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 등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

둘째, 복지원에 과밀 수용하여 피수용자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무임금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셋째, 피수용자들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뿐 아니라 성폭력이 만연했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부적절한 의료조치와 사망진단서 조작, 암매장 등이 이뤄졌다.

넷째, 정부는 복지원의 실상을 알고 있었으나, 1987년 검찰 수사가 있기까지 실태조사나 피수용자 구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섯째, 부랑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람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연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들의 신원을 허위로 기재, 혹은 강제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수용자들 중 현재까지 생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족관계와 원적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진화위는 ‘복지원을 불순분자에 의한 조직적인 집단행동 유발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한 국군보안사령부가 복지원에 요원을 침투시켜 ‘갈채공작’이라는 수사 공작을 통해 간첩혐의를 포착하려 했던 것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공식 사과할 것,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 △각종 시설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 동의할 것, △부산시는 복

지원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적합한 예산, 규정, 조직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2기 위원회에서 복지원의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기관이 복지원 피해자들의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해서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화위 조사결과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먼저, ‘부랑인’에 대해 낙인을 찍고,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분류하여 단속하고, 강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법을 대신 내무부 훈령을 통한 강제 수용이 위헌·위법했다는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른바 ‘부랑인’을 단속, 강제 수용했다면 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답해야 했다. 나아가 소관 부처를 내무부로 정한 배경과 과정, 훈령 입안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단속·수용·보호를 위한 임무로 ‘안보적 측면에서 범법자, 불순분자 등의 활동을 봉쇄’할 것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불우이웃을 도와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단속한 부랑인 중 범법자, 불순분자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퇴소 후에도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명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복지’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제정한 1975년 무렵 유신체제가 맞닥뜨린 국내 정치·경제적 위기, 베트남 공산화와 미·중 데탕트를 계기로 한 미군 철수 움직임 등 국제 정치적 위기, 그 속에서 절대 권력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박정희 정권의 의도 등과 관련해서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와 가정에서 격리되어 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폭력과 가혹행위, 성폭력, 강제노역 등 참혹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고, 퇴소 후에도 사회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 현재까지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기 짝이 없다. 교도소 보다 더한, 지옥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난 것만으로는 그 이후의 삶을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위는 누적된 과거의 참혹한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래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깊이 분석했어야 한다.

진화위는 복지원의 사망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많은 657명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명부나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이 추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력 등의 한계로 진화위가 직접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사망자와 유가족을 전수 조사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조치, 불법으로 신원이 변조된 피해자들의 신원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 마련, 박인근 원장이 축적한 재산에 대한 환수 등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은 것도 한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일이 걸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며 불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좀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화위의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진실규명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인과 올해 12월 9월까지 추가로 접수될 사건에 대해서 진화위가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 결과와 권고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진상규명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만, 아직 저희는 국가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도 받지 못해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한종선씨의 말이다.

임순영 진실의 힘 연구위원

[회원 소개] “나무를 돌보듯”

조경사 민원식 회원님



오랫동안 진실의 힘을 후원하는 민원식 회원을 만났습니다. 진실의 힘 사무실과 가까운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데요. 사무실로 찾아 갔을 때 초록 식물들이 가득한 사무실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초록 생명을 키우고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조경사입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한 지는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월급의 반을 후원금으로 냅니다. 월드비전, 그린피스 등 해외 활동을 하는 단체에 주로 기부를 하는데 적은 돈으로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나라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정작, 본인은 먹고 입고 자는데 쓰는 돈을 많이 아낀답니다. 옷은 주로 황학동 시장에서 사고 운동화도 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사 신고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집에서는 금토일 3일을 자고, 월 화수목 나흘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지냅니다. 나흘을 위해 서울에 집을 또 마련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직장 주변 찜질방 등에서 지냈답니다. 다행히 요새는 지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땐 직업 군인이었고 610 민주항쟁 당시엔 외판 사원이었는데 시위대 속에 있다가 을지로에서 연행이 되었습니다. 3천여명 연행자 중 40여명이 구속되었는데 그중 한명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9선언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뒤 아르헨티나에 가서 살다가 지금의 한국학교 교사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답답한 실내보다 야외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연하게 시작한 조경일이 딱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에 후원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의 강연을 듣다 진실의 힘 얘기를 듣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후원을 이어온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후원하는 게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분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정부가 간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지만 10년 전만 해도 조작간첩 피해자 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일이 “아무일도 아니지”는 않았습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담담히 어려운 곳을 살피면서 사시는 민원식 회원님을 만나고 나니 차분함도 번지는지 제 마음도 한결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회원님.

[지원사업은 진행중]

‘월남으로 간 동창생’을 찾아서-군인의 눈으로 본 전쟁이야기-



금마국민학교 제48회 졸업기념 <출처> 금마초등학교 역사관



월남참전군인 제공 임호영

석미화(평화활동가, 아카이브 평화기억 대표)

이 연구는 한 장의 포스트잇에서 시작되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열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계급, 소속 부대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같은 해 같은 국민학교(이 글에서는 그 시대에 맞춰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로 쓴다)를 다녔다. 이 동창생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궤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청년 시절 전쟁을 경험한 것이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금마국민학교는 1911년 이리·익산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학교이다. 양정석과 동창생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이 학교에 들어갔다. 전후 복구 시기인 가난한 시절 학교에 다니고 1960년 초에 졸업한 금마국민학교 남자 동창생 1백여 명 중 10여 명은 월남에 갔다. 그중 대어섯은 전투병이었다. 돈을 벌러 간 친구도 있었지만 강제로 간 친구도 셋이나 있다. 누구는 영창에 가기 싫어서 누구는 더 나쁜 선택을 안 하기 위해 월남에 갔다. 전투병으로 간 친구 중엔 전쟁터에서 맹활약했으나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도 있다. 고인이 되었거나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빼면 돌이 남는데 한 사람은 현재 와병 중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연구에 함께하는 참전군인 양정석이다. 그는 69년과 71년 두 번 월남을 다녀왔다. 백마부대 전투병으로 참전한 양정석은 두 번째 월남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지금도 종종 악몽을 꾀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석미화는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평화 활동을 하며, 그 전쟁을 다녀온 참전군인과 만나지 못한 것을 내내 밀어 둔 숙제처럼 여겼다. 가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참전군인과 맞닥뜨릴 때마다 그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 컸다. 평화란

자세히 들여다보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만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 활동 틈틈이 참전군인 구술활동을 하던 중, 어느 날 참전군인 양정석이 저고리 안쪽에서 꺼낸 포스트잇 한 장을 보곤 그들을 만나야 겠다고 생각했다. 국가에 동원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에 대한 연구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익산시 금마면 금마국민학교 1960년도 졸업생 이야기를 중심으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1964년부터 73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기억 속에 사실상 이 전쟁은 한국 사회에 '잊힌 전쟁'으로 남아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청년으로 '전장(戰場)'을 경험한 참전군인의 삶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국가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현장에 젊은이들을 동원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고통'은 개별화하였다. 이 연구는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였으나 '귀환'하지 못한 참전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나선다. 폭력의 현장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그들, 가해의 자리에 섰으나 동시에 피해자로 존재하는 그들, 가해와 피해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역사의 당사자로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다.

월남으로 간 금마국민학교 60년도 동창생 이야기는 월남전 참전이 학교, 마을,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었음을 인지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월남전 파병의 기억을 살펴본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국민학교 동창생의 서사를 통해 월남전의 기억을 찾아간다. 이제껏 말로만 전해 내려왔던 참전군인의 전후 삶을 확인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 전쟁과 폭력의 역사, 그로부터 연결된 삶을 이야기한다.

연구의 시작은 월남에 간 동창생을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꺼이 그 일을 맡은 이는 고향

에 오래 살고 있는 또 다른 동창생이다. 동창생의 소개로 월남 다녀온 동창을 만나는 자리엔 보통 네댓 명의 동창과 선후배가 자리한다. 여러 사람의 도움 속에 연구가 이루어 지지만 동창생을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들을 만나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코로나가 발을 묶어 만남이 차일피일 미뤄지기도 다반사다. 우리는 동창생을 만나기 위해 산속 목장으로, 감자밭으로, 익산 월남 참전기념탑으로, 향교로, 금마면 일대를 동분서주한다. 70대 중반 80줄에 들어선 동창생들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참전군인에게 전쟁 경험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된 ‘삶’의 문제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지 못한 참전군인의 이야기에 다가간다. 그들의 전쟁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불러오고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참전군인 이야기를 통해 ‘피해’ 중심의 인권의식을 넘어 ‘폭력’의 현상이 빚어내는 근본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돌아봄으로써 평화와 인권 의식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월남으로 간 동창생을 찾아 길을 나선다.

※ 국민학교 동창생 서사를 통해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만나고 전쟁과 평화를 생각합니다.
‘국가에 동원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삶에 대한 연구’를 응원해주세요.

[모금참여하기] <https://youtu.be/IST010ETvuk>